완도 명사십리 해양치유산업 '탄력'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완도군 전국 유일 시범단지 지정
치유센터 등 내년말 완공…전문병원·연구단지 유치도 추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도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에 발맞춰 완도 신지명사십리 일원에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치유'는 바닷물·갯벌·해조류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 각종 질환의 관리·예방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해양치유산업'이란 해양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재화의 생산·제공을 총칭하는 웰니스(Wellness) 산업의 일종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해외 선도 사례에 주목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해왔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천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천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완도를 비롯해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충남 태안, 4곳이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완도군이 선도 시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설계비 17억원을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1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일원에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 해양치유 전문병원,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해양치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등을 유치해 2030년까지 국내 제일의 해양치유 거점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가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치유 자원인 해조류의 최대 생산지 완도를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협 '설맞이 직거래 행복장터'

1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무안군 삼향읍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최대 30% 할인하는 '설맞이 직거래 행복장터'(17일까지)를 열고 돼지고기 및 한우 시식행사와 떡메치기 체험을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신안 해상풍력단지 모델로 덴마크 에스비에르항 선정

김영록 전남지사 배후단지 방문 협력방안 모색

전남도가 신안군에 조성할 예정인 해상풍력단지의 모범 모델로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선정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현지 시각)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방문,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면담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시찰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스비에르항은 덴마크 유틀랜드 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로 1868년 건설됐으며, 어업 및 오일·가스 선적 중심 항만에서 2007년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변모했다. 현재는 유럽 내 설치된 해상풍력 시설의 절반 정도를 선적할 만큼 활성화됐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억3000만 유로(약 3000억원)를 투자해 1㎢(30만 평) 면적의 해상풍력 전용 배후단지를 조성했다. 2018년에는 1.2GW의 발전시설 용량을 선적했다.

덴마크는 지난 1991년 세계 최초로 빈드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풍력 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를 보유한 국가이자, 현재 전력의 43%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안군 일원 해상풍력단지 발전 설비용량(3GW 이상)을 반영해줄 것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지원부두(철재부두 3만톤급, 1선석) 및 배후단지(27만6000㎡) 조성사업을 우선 반영해줄 것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의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배후단지에 생산-조립-해상운송-유지보수 등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 조성, 정비인력 양성 방안, 유럽 풍력발전 트렌드 등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 시찰 후 김 지사는 "한국의 풍력발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30년 전 풍력발전을 시작해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에스비에르항과 배후단지가 전남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로 3GW 사업개발 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지석천에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구축

국토부 하천관리 선도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에 전남도내에서는 나주 영산강, 화순 지석천이 선정됐다.

이들 하천에는 국비 48억원으로 하천 내 수문 등 배수시설물과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해 올해 국토부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은 14개 하천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하천 내 4000여개의 배수시설을 원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종합상황실에서 수위를 감지하는 원격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하천 재해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국가하천 수문 스마트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하천 수문의 유지관리는 마을이장 등 인근 지역 주민을 수문 관리인으로 지정해 직접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민간관리인의 고령화(평균 연령 만 69세),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특히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이번 사업을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등 긴급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홍수 및 침수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평소에도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농촌인력 고령화 등으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95kg 폐기

2889건 중 23건 부적합 판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695㎏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화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1751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138건 등 총 2889건에 대해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0.8%에 해당하는 23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4건, 쑥갓, 취나물 각 3건, 참나물, 열무잎, 당귀잎 각 2건, 유채, 치커리, 호박잎, 샐러리, 깻순, 아욱, 청겨자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페나피르 3건 ▲디니코나졸, 다이아지논 각 2건 ▲노발루론, 인독사카브, 포스티아제이트, 플루벤디아마이드, 에톡사졸, 에토프로포스, 클로르피리포스, 카보퓨란, 보스칼리드 각 1건으로 총 13종이었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돼 시중 유통이 차단됐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설 전후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시·군 합동 단속반 48명 편성

전남도는 설 연휴를 계기로 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24개조 4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이달 31일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는 전남지역 감시 대상 47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각 사업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 방지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인 24~27일엔 도와 각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과 오염 우려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환경부, 화학방재센터 등과 보고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이후에도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